

경제정책위원회

OECD 경제정책위원회(Economic Policy Committee: EPC) 산하 구조개선작업반(WP1)은 10월 21-22일 양일간 Grice 의장 주재로 경제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① 회원국들의 구조개선정책 및 고용전략에 대한 평가, ② 상품시장에서의 규제, ③ 유가변동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 주요 논의내용

가. OECD 회원국들의 구조개선정책 및 고용 전략에 대한 평가

OECD는 지난 10년 동안 회원국 사이에서 1인당 GDP와 생산성 추세의 격차가 벌어진 원인은 생산성과 GDP 성장률에 대한 국가간 제도와 구조정책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특히 고용률과 취업자의 근로시간 등으로 평가되는 노동력 활용 격차와 근로시간당 GDP 등 생산성 격차에 기인한 국가간의 상대적 GDP 수준 차이는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일부 회원국에서는 변하지 않지만, 그 외 회원국에서는 확대되어왔다고 평가하였다.

1인당 GDP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제고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망 산업규제 및 기업규제의 완화, 공기업의 축

소, 진입장벽 제한, 농업생산자지원 감축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노동시장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근로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러한 권고안에는 실업급여기간 제한, 장기 실직자 수급액 감소를 통한 근로의욕 제고, 실업급여 혜택 제한, 연금체계 보완 정책 등이 포함되었다.

나. 상품시장에서의 규제에 관한 논의

OECD는 최근 몇 년간 회원국에서 상품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는 상당 수준 감소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다만 상품시장에의 정부개입 범위와 국제자본 및 무역흐름에 대한 장벽은 현저히 감소되었으나 기업활동에 대한 국내장벽은 여전히 개혁속도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상품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감소는 ‘가격규제’와 같은 강제적 형태의 규제 완화 및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통제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민영화 분야에서의 추진실적은 그다지 크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최근의 규제개혁 진척에도 불구하고 비제조업부문의 진입장벽과 같이 경쟁을 저해하는 ‘경성규제’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회원국 전체적으로 조망해볼 때, 상대적으로 규제강도가 높던 국가가 보다 많은 개혁을 이루었으며 이 결과 OECD 회원국간의 상품 시장규제가 보다 동질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OECD 사무국은 설명하였다. 특히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는 수렴패턴이 불명확하나 국제무역 및 투자장벽과 관련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경향을 보여왔으며, 이는 무역분야에서의 규제가 가입국에 높은 개방도를 요구하는 다자간협정으로 초국가기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상품시장규제의 수렴화가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가 그룹과 '상대적으로 제약된' 국가 그룹간 규제환경은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상품시장규제가 강한 국가일수록 상이한 정책영역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노력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다. 유가변동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 및 정책적 대응

2004년 10월 12일 현재 WTI 유가(油價)는 배럴당 53.5달러로 사상 최고치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1999~2003년 중 평균가격(26.6달러)에 비해 두 배를 상회하는 수준인바, 화석연료는 2030년에도 OECD 1차 에너지 소비의 약 90%, 석유는 약 40%를 차지해 전 세계의 석유에 대한 의존은 지속될 것으로

OECD 사무국은 전망하였다.

동 사무국은 세계 석유매장량(약 3조 배럴 추정)이 세계수요를 충당하기에 충분하며 유전개발 투자가 착실히 추진된다면 OPEC의 공급능력은 점점 높아질 전망이지만, 세계 석유매장량 규모 및 매장지역에 관한 지질학적인 증거에 비추어볼 때 균형국제유가는 향후 25년 동안 점진적인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세계수요 및 비OPEC 공급량의 낮은 가격탄력성 등으로 단기적으로 유가가 공급 및 수요변화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위험, 예상외의 높은 석유수요, 석유탐사 부진 등으로 단기적인 유가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가격추세가 불투명해져 유전개발투자도 억제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특히 최근의 고유가는 1970년대에 비해 지속성은 떨어지나 어느 정도까지가 일시적인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며, 부분적으로는 단기 공급능력 확충 부족, 투기활동 등에 기인하나 이 요인들은 급반전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전체 원유공급량이 세계수요를 충당하기에 충분하다 하더라도 석유정제능력의 한계 등으로 석유제품간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라. 단기 경제적 탄력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

2001년 이후 주요 국가의 경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를 극복하고 성장세를 회

복하는 양상은 국가별로 상이한 형태를 보였다. 무엇보다도 영미권, 북구지역, 스페인 등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었으나 유로지역은 보다 장기간의 경기수축기를 경험한 것으로 OECD 사무국은 설명하였다.

국가별 회복속도의 차이는 한 나라에 특정된 충격이나 국가별 대응방식의 차이를 반영하겠지만 결국 각국 정부의 구조정책이나 제도(structural policies and institutions)의 결과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요회복의 부진, 고실업의 지속, 완만한 임금조정, 자원 재배분의 지연, 경제주체의 신뢰도 하락 등 국가별로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하였다.

무엇보다도 임금조정, 고용, 소비 및 투자 등에서 경직성(rigidities)이 존재할 경우 경제회복력이 약화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2001년 이후 주요 국가들의 경제가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국가별 회복능력은 나라마다 상이하였던바, 이러한 회복능력의 차이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민간소비와 주택건설의 추이에서 찾고 있다.

2. 주요 토의내용

회원국 대표들은 구조개선정책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노동시장에서의 개혁은 생산과정의 개혁보다 무척 어려운 것으로 공공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조기퇴직을 유발하는 고령자연금은 근로유인을 저하시키는바, 연금개혁을 통해 이런 부작용

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품시장에서의 규제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서는 상품시장 규제개혁의 추진에서 그 진행수준을 평가하는 지표 선정에 규제의 질(quality)을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특히 서비스부문에 대한 보다 상세한 지표 구성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또한 향후 연구에 있어 거시경제적 분석을 추가하여 창업비용과 동태적 기업활동(dynamics)간의 관계와 같이 보다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유가변동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급격한 유가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는 불가피하며 석유시장에서의 옵션 또는 선물 등 파생상품을 활용한 헤지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중국이나 개도국의 급증하는 석유수요에 대해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혹은 에너지효율 증대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이 지원하고 이와 함께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단기 경제회복능력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국가별로 나타나는 경제회복능력의 차이는 각국이 직면한 고유한 문제들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나라마다 경기순환의 정점과 저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각국의 경제회복 정도를 비교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3. 전반적인 평가

이번 회의에서 OECD 사무국 및 대다수 회원국은 OECD 차원에서의 고용전략 및 상품시장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향후의 “OECD 회원국의 고용전략 평가”는 이번 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하며, 앞으로 상품시장 규제에 대한 논의는 “상품시장 경쟁과 경제적 성과”라는 관점에서 보다 더 포괄적인 논의

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구가 향후 OECD 사무국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특히 국가간 상품시장규제와 고용전략부문에 대한 비교연구에서는 정치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하므로 OECD 차원의 국제적 공조노력이 이 어려움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회원국들은 공감하였다.

【우상현 주OECD대표부 1등서기관

shwoo02@mofe.go.kr】